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2월 13일(월) 15시 : 3.13 전주 만세운동 재연 사업 기획 회의
- 2월 15일(수) 15시 : 기자촌 기록화 사업 편집 회의

■ 연구원 소식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작일: 2023년1월16일(월)부터
- 기부금합산기간: 2022.01.01.~2022.12.31.

영수증 발급과 관련 수기 영수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신간회 창립 - 1927. 02. 15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에 자극받아 국내에 있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공주의 진영은 민족유일당운동을 조직했다. 이 운동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신간회가 96년 전 오늘 서울에서 그 깃발을 올렸다.

1926년 말 태동기 원안의 이름은 신간회가 아니라 신한회(新韓會)였다.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결사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가 허가하지 않자 신간회(고목에서 새 가지가 솟는다는 뜻의 '新幹出古木'에서 유래)로 개명했다. 1927년 1월 19일 신간회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된 3항의 강령도 원래 초안은

- I. 조선민족의 정치경제의 궁극적 해결을 도모한다.
- I. 민족적 단결을 견고하게 한다.
- I. 타협주의를 부인한다.

였으나 단체등록허가과정에서 '조선민족'이 '우리'로 '궁극적 해결을 도모한다'가 '각성을 촉진한다'로 '민족적 단결'이 '우리는 단결'로 '타협주의' 부인이 '기회주의' 부인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당시 민인들은 당시 민중은 '기회주의 일체 부인'이란 항목에서는 자치론자를 떠올렸고, 정치적 각성 등의 문구에서는 민족 독립을 떠올렸다고 한다.

단체 결성 후 얼마간 일제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신간회 결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산발적으로 일어날 민족운동이라면 오히려 한 군데로 모아놓는 것이 감시하기에 편리하다는 점, 신간회 역시 다른 운동단체처럼 내분으로 무너질 것이며 그럴 경우 민족운동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급속하게 번진 전국적 활동에 크게 당황했다. 신간회는 표면적으로 중앙집행부를 장악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쥐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40여 개에 이르는 지방조직의 회원 상당수는 사회주의자로서 노동·농민·청년 운동조직의 구성원이었다. 그 때문에 일제는 1928년 2월 열릴 예정인 정기대회를 금지했다. 일제가 내건 금지 이유는 "반항적 기운을 선도하고 민족적 반감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신간회 지회는 일제의 탄압을 대중투쟁으로 철회시키는 비타협적·전투적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족주의 좌파가 장악한 신간회 중앙본부는 '온건화' 노선을 택했는데 총독부가 "신간회에 가입돼 있는 <조선일보> 사원 전원이 탈퇴할 경우 복간을 허락하겠다"는 제안에 경도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29년에도 정기대회가 불허되자 신간회 각 지부는 1929년 6월 인근 지역대표의 대표를 뽑는 '복(複)대표대회'를 열어 새 임원을 뽑고 새 규약을 채택했다. 창립 당시와는 달리 상향식으로 모인 의견의 결과는 반수 가까운 사회주의자가 간부로 뽑히고, 역시 사회주의자인 허헌이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인 허헌 체제는 일제 탄압을 더욱 심하게 받았다. 이에 더해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전국적 대중운동으로 고양시키려했던 '민중대회사건'을 계기로 조직 전체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민중대회 전 이를 파악한 일제 경찰은 일제히 주요 관계자를 검거했다. 이 사건으로 허헌을 비롯한 신간회의 지도급 인사 44명과 조선청년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등 사회운동 관계자 47명이 체포되었다.

대규모 검거 이후 신간회는 회원 수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조직의 세가 확대되는 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부였다. 새로 집행위원장이 된 김병로가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모색하는 등 타협적인 노선으로 기운 것이다. 김병로는 최린·송진우 등 자치론자들과 함께 신간회를 자치운동의 매개조직으로 삼으려 했고 지방의 지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타협적인 지도부의 등장은 신간회 해소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조직은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해소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30년 부산지회를 통해서였다. 그러자 다른 지회에서도 해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신간회는 1931년 5월, 창립대회 이후 최초로 열린 전체대회를 통해 찬성 43, 반대 3, 기권 30으로 해소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후 새 단체 조직을 안건으로 해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제 경찰의 강압으로 신간회는 완전한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간회 해소 이후 민족주의 세력은 시련의 길로 들어섰다. 민족주의 진영 대부분이 1930년대 본격적인 친일로 들어섰다. 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 인사들은 이후 더 이상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개인적 차원의 저항에 그치고 말았다. 사회주의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신간회에 참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던 '합법 공간을 통한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를 스스로 차버리는 실기를 저지르고 말았다. 사회주의자는 지하로 들어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전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